

【 2017.12.11(월)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장은 11일 오후
2시30분 대한건
설협회 경기도회
를 방문해 평창
올림픽을 홍보.



【 2017.12.11(월) 강원도민일보 】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
설협회
강원도
회장은
11일 오후 2시 30
분 수원에 위치한
건설협회 경기도
회를 방문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을 홍보한다.

소형건축물도 건설업체가 시공

내년 6월부터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은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생겨도 피해보상이 어려웠던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사 2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건축주의 직접 시공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6월 이후부터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입법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거·비주거용 모두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했다. 이달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으로 강화된 것과 기준을 맞춘 것이다.

또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과 학교·병원 등 비주거용 건물은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가 작더라도 안전을 위해 전문 건설업자에게

내년 6월부터 다가구주택 등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일절 금지
 도급물량 年 5兆~10兆 늘듯
 '건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맡기자는 취지다. 지금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했던 것은 시공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물은 가급적 건축주의 자율을 존중해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런 소형 건물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 대상이다.

특히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가 거의 없어서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지거나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잦다. 실제 이번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 빌라 등이 대부분 건축주 직접 시공이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내진 기

준을 아무리 높이고 외장재의 내진을 강화해도 시공이 부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론 무면허업자(집장수)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 시공'도 비밀비재하다. 건축주가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직영 공사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0조원(3.3㎡당 300만원 기준) 규모로 추산된다. 민 의원은 "위장 직영을 통한 탈세 규모만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으로 불법 소규모 건축물의 상당수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안전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사례 분석(2014년) 결과, 무등록업자가 시공한 공사로 인한 하자가 전체의 74.3%였다. 공사금액 5억원 미만 현장의 사망자 수는 전체의 39.9%로,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 도급 물량이 연간 5조~1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

社 說

무면허 건축, 이참에 뿌리 뽑자

포항 지진 때 피해가 컸던 소규모 건축물의 대부분이 이른바 집장수로 불리는 무면허업자들이 시공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법, 부실 건축물이 들어서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국회가 소규모 건축물 시공에 무면허업자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한 데서 큰 의미를 갖는다. 건축주 직영 시공 대상 공사에 대해 무등록자가 불법 도급 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무등록자가 불법 시공을 할 경우 여러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된다. 부실시공,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

그동안은 건축주가 무등록자에게 불법 도급을 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자격자의 부실 건축물 양산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꼽힌다. 5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중대 재해 발생비율은 전체의 40%에 달한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율은 건설업 평균에 비해 2배가량 높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제고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건축주 직영 시공 상당수가 매매 대상이어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부실시공이 이뤄져도 적절한 하자보수 청구 등이 불가능했던 게 사실이다. 부실시공 처벌 등은 건설업자에 한해 적용되고 비건설업자가 시공할 경우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안전사고도 대폭 줄어들 게 틀림없다.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등의 피해가 66%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무등록자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 등이 74.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자의 위장 직영을 통한 탈세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됐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법보다는 집행이 제대로 돼야 한다. 소규모 건축시장에서 더 이상 무면허업자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장, 평창올림픽 홍보...경기도회 방문



오인철 대한건설 협회 강원도회 장(사진)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나섰다. 도회는 10일 오인철 회장이 강원도의회 올림픽특별위원회 위원

과 함께 건협 경기도회를 11일 방문해 평창올림픽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회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하는 등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불법 소형 건축물, 제도권 편입 부실 시공·안전사고 방지 효과

뉴스포커스 '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건축주 직접시공 금지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빌라는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기둥 3개가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휘어졌다. 조사 결과 철근을 적게 쓰려고 시공 기준보다 철근간격을 2~3cm 더 넓힌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시공했다면 균열이 생기는 정도에서 그쳤겠지만 부실 시공으로 기둥이 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이른바 ‘집장수’로 불리는 무등록업자에 의해 마구 지어지는 소규모 주택의 불법·부실 시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판 피사의 사탑’으로 한동안 조롱거리가 됐던 충남 아산의 20도 기울어진 오피스텔도 집장수인 건축주의 직접 시공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준공을 앞두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해체 처리된 오피스텔의 바로 옆 쌍둥이 건물도 안전진단 결과 철거가 결정됐다.

전문 건설업자 시공하지 않은 현장 재해관리 취약 따른 안전사고 급증

임대용으로 우후죽순 지어지고 있는 원룸형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들도 건축주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명목 아래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개인이 직접 원룸이나 소형 빌라를 지을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부 감독이나 감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주거용 661㎡(약 200평) 이하, 비주거용 495㎡(160평) 이하 규모 건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다.

이러다보니 소형 건축물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잦은 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사례 분석결과,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등 피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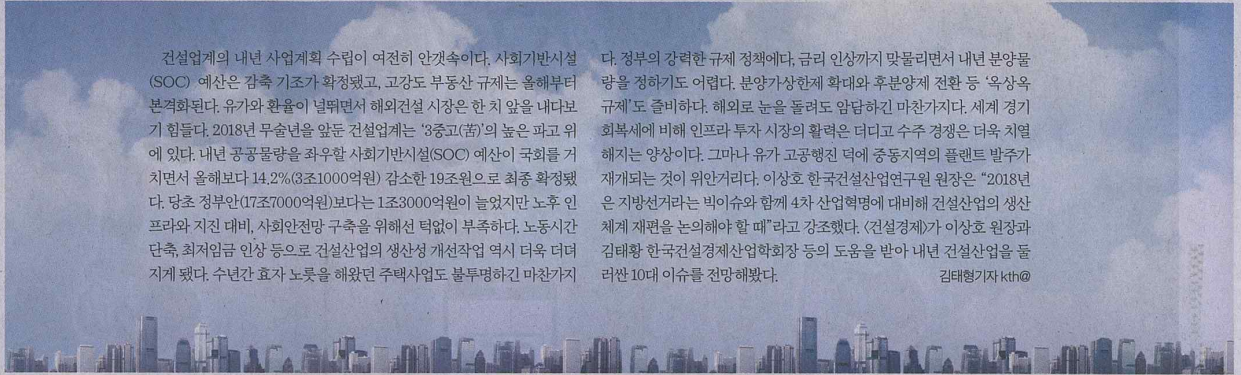
66% 이상을 차지하며 무등록자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 등이 74.3%로 대부분이었다. 건산법상 하자담보책임과 부실시공 처벌은 건설업자만 대상일 뿐 집장수와 같은 비건설업자는 처벌대상에서 비껴간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들도 위험에 방치돼 있다.

전문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다른 건설현장에 비해 사고가 빈번하다. 5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중대재해 비중은 전체의 39.9%로 재해관리가 취약한 편이다. 2014년에 건설현장 사망자 366명 중 146명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재해율만 봐도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재해율이 평균(0.75%)의 1.9배인 1.42%에 달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포항 지진 피해에서 보듯 지진에 취약한 부실 건축물을 제도적으로 막으려면 제대로 된 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소규모 건축물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형기자 kth@

SOC 예산 축소·부동산 규제 이어 해외마저 '불확실성'



건설업계의 내년 사업계획 수립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감축 기조가 확정됐고,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유가와 환율이 널뛰면서 해외건설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2018년 무술년을 앞둔 건설업계는 '3중고(苦)'의 높은 파고 위에 있다. 내년 공공물량을 좌우할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올해보다 14.2%(3조1000억원) 감소한 19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는 1조3000억원이 늘었지만 노후 인프라와 지진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 개선작업 역시 더욱 더뎠다. 수년간 효과 노릇을 해왔던 주택사업도 불투명해진 마찬가지

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다,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내년 분양물량을 정하기도 어렵다.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후분양제 전환 등 '옥상옥 규제'도 즐비하다. 해외로 눈을 돌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세계 경기 회복세에 비해 인프라 투자 시장의 활력은 더디고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유가 고공행진 덕에 중동지역의 플랜트 발주가 재개되는 것이 위안거리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2018년은 지방선거라는 빅이슈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건설산업의 생산 체계 재편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건설경제>가 이상호 원장과 김태환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내년 건설산업을 둘러싼 10대 이슈를 전망해봤다. 김태환기자 kth@

변화·혁신 필요하지만... 먹거리 위축·규제 일색 '생존 기로'

1 SOC 예산 다운사이징

내년 SOC 예산이 10년 만에 20조원 밑으로 떨어진다. 당초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 증액돼 총 19조원으로 확정됐지만 여전히 올해보다 14.2%(3조1000억원) 줄었다. 포함 지진을 계기로 안전투자 요구가 확산되고 인프라 투자의 경기 활성화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져서다.

건설업계는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일자리가 1만4000여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0.06%포인트 하락한다고 우려한다. 1000억원 규모의 한 도로공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연간 투입 인력이 1만8726명이고 투입 장비는 6088대였다. 무엇보다 정부 SOC 공사의 절반을 수주하는 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SOC 예산 감소에 대한 업계 안팎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건설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 발전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 만큼 신규 인프라 투자 대신 노후 시설물 개선이나 도시재

생 등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도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낡은 전통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성장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건설산업은 혁신보다 생존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당장 국내 건설수주가 올해보다 15% 감소한 133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2016년(164조9000억원)을 전후로 지난 3년간 지속된 수주 호조세가 꺾이는 셈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민간 수주와 공공 수주가 각각 16.9%와 10.5% 감소하고 건설투자도 큰 폭으로 둔화(70~80%)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수주 감소세는 내년에 본격화돼 향후 2~3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CTX) 등 대형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까지는 'SOC 다운사이징'의 시대다.

2 고강도 부동산 규제

내년 부동산 시장도 예고된 악재가 즐비하다. 건설연은 3대 리스크로 유동성 축소와 수요 위축, 준공 증가를

꼽았다.

우선 다주택자들의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일 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을 끌어내린다. CD(양도소득증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격이 6개월 후 1.69% 하락한다.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새 대출규제 인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채 적상환능력비율(DSR)은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까지 높일 전망이다. '과열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이미 강화됐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과 후분양제 전환 등도 리스크 요인이다.

내년 준공 아파트 물량은 44만4000 가구로, 올해(37만9000가구)보다 17% 늘어난다. 준공 아파트가 40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1990년대 이후 처음이다.

악재가 겹치면서 내년 부동산 경기는 하락세가 뚜렷할 전망이다. 건설연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 각각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매매가격은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10% 하락을 전망했다. 특히 경남, 울산 등 경기가 어려운 지역의 주택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물량은 올해(34만가구)보다 26.5% 감소한 25만가구로 예측했다. 인 허가 물량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탓에 올해(47만가구)보다 34% 급감한 16만가구로 예상했다.

이상호 건설연 원장은 "주택가격 하락보다 거래량과 분양물량 감소가 심각하다"며 "일자리 감소폭은 메가톤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널뛰는 환율·자재가격

'원화 강세'를 뜻하는 원·달러 환율 급락은 해외건설 시장의 악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080~1090원대 수준으로 지난해 말(1208원)보다 120원가량 떨어졌다. 올해 원·달러 환율을 평균 1200원대로 보고 사업계획을 짰 건설사들은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내려가면(원화 강세) 해외건설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기존 수주 사업의 기성금을 원화로 환전하면서 환차손을 입는다. 내년도 환율 전망도 1060~1115원 사이로 좋지 않다.

현대건설은 올해 3분기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순자산(법인세 차감 전 달러 순자산)이 260억 원 남게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2분기까지 환율 변동으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1151억원 줄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도 환율 효과로 현금성 자산이 각각 271억원과 23억원 감소했다.

반면 외화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건설사들은 되레 이득이다. 두산중공업은 원·달러 환율이 10% 내리면 1243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GS건설은 5% 하락 때 175억원의 순이익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대림산업도 올해 환율 효과로 현금성 자산이 30억원 늘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자재 구매부터 현지 공사 진행, 대금 징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율이 건설사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다양한 파생상품 체결과 발주처와의 협상으로 외화 관련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재 가격도 변수다. 제강사들은 지난 8~10월까지 철근 판매가격을 세 차례 걸쳐 인상했다. 레미콘도 지역별로 단가 인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도시재생·지방선거 호재 속 적정공사비 확보 '절대과제'



지역개발 공약경쟁... 신규 인프라 발굴시장 '활력소' 기대

4 지방선거·지방정부

지방선거는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지역 인프라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장이다.

지역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SOC 예산이 국회에서 1조3000억원 증액된 것도 내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이 깊다.

실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사업(288억원)을 비롯해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3360억원)과 이천~문경 철도건설(2876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1455억원) 등 지역 민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안보다 크게 늘었다. 당초 정부안 없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510억원)도 추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무려 143개의 지역공약을 내놨다. 간산연은 대한건설협회 의뢰로 지역 인프라 사업을 발굴해 내년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권력 교체 시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리스크다.

지방선거에서 SOC 사업이 주목받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에서 건설업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주요 광역시·도에 건설투자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8.6%다. 제주(26.7%)와 강원(26.4%), 전북(20.4%)은 20%가 넘는다.

문 대통령이 핵심 개혁 의제로 밝힌 지방분권도 지역 인프라 투자에는 호재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담는다는 구상이다. 지역 인프라 투자의 최대 걸림돌인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지자체 공동세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5 도시재생·노후인프라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된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공약으로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이 투입된다. 내년 관련 예산도 늘었다. 올해 2300억원이던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내년에 5배 이상 많은 1조1439억원을 배정했다. 도시재생기금 지원액도 올

해 651억원에서 내년에는 10배가 넘는 6801억원으로 늘었다.

도시재생뉴딜은 사업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70개 안팎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212개 사업을 제안해 평균 3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사업 유형에 따라 100억~200억원의 초기 사업비가 지원돼 내년부턴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포함 지진으로 인프라 안전이 재조명되면서 노후 인프라 투자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도 지진 여파로 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 예산 1474억원이 투입되고,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조사와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한 건축안전(내진) 예산 139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제정안은 오래된 교량·터널 등 인프라를 대상으로 5년마다 관리계획을 세우고 총당금을 쌓는 내용이다. 유지관리를 잘하고 재원확보에 애쓴 지자체에는 정부지원액을 더 얹어주는 등 기존 법보다 재원마련에 무게를 뒀다.

6新高유가시대

'신 고유가시대' 조짐은 해외건설 경쟁 신호다.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석유수요는 높아가는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기간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유가가 급등세다. 브렌트 유에 이어 두바이유도 배럴당 60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내년 국제유가를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50~55달러 내외로 예상했다. 유가 상승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플랜트 발주물량 증가로 이어진다. 플랜트는 여전히 전체 해외의 70%에 육박한다.

관련기관들이 전망하는 내년 해외건설 수주규모는 350억~400억달러 수준

이다. 올해 해외수주액이 작년(282억달러) 수준에 머문다고 보면 최대 40%가량 늘어날 수 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해외 사업비중이 높은 대형사들도 내년 해외수주 목표액을 올해 실적보다 20억~30억달러가량 더 높여잡았다.

국제유가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발전효율이 높은 원전 건설수요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11년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뒤 원전 50기를 가동중단했던 일본은 전기료가 급등하자 2030년까지 원전 44기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신규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1조원(150억파운드)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도 그 일환이다. 미국은 31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승인했고, 프랑스도 당초 2025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75%에서 50%로 줄이려던 계획을 5~10년 늦추기로 했다.



정부의 미래 건설정책 비전 ‘기대반 우려반’...

7 건설산업 고도화 전략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건설산업 고도화 전략’은 미래 건설산업 정책의 바로미터다. 성장지체에 빠진 건설산업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경쟁력 강화방안과 일자리 개선, 불공정관행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의 로드맵인 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된다.

다만 업역·업종간 칸막이, 발주제도의 경직성, 과도한 등록기준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은 대부분 빠질 것이라 관측이다.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건설 기술 확보 방안과 해외건설 역량 강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이 담긴다. 세계적인 컨설턴트 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긴 용역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불공정관행 근절 방안에는 원도급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률 상향, 공종별 원도급 금액 공개, 임금지급보증제, 적정임금제, 사회보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발주기관-원도급 관계보다 원-하도급 간 불공정행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 발주자의 대표적인 ‘갑(甲)질’로 꼽히는 간접비 미지급 해소를 위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안을 눈여겨 봐야 한다.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은 낙후된

이미지 전환을 위해 일자리의 질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구체적으로 적정임금제, 임금지급보증제, 근로자 사회보장 강화, 기능인 양성·교육 및 등급제 등에 대한 실행방안이 담긴다. 다만 노무비 전체를 가격경쟁항목에서 빼거나 노무단기간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게 할 경우 다른 공사비 감소로 이어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 적정 공사비 확보

공공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년에 개선될지 주목된다. 최근 10년간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은 10분의1 수준까지 줄었고,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기업의 30% 이상이 매년 적자다. 지금은

최초 설계 단계부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공사비가 책정되고 예정가격 산정과 입·낙찰 단계를 거치면서 계단식으로 계속 깎인다. 시공 단계에선 발주기관들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현행 공사비 산정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건설사들은 우선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을 요구한다. 100억~300억원대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해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말고 해당 구간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에 대해선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설계가격 적정성 검토와 공사비 이의신청제 도입에 긍정적인 만큼 제도화가 주

목된다.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개선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입·낙찰 단계에선 낙찰률 상향조정이 관건이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은 17년째 제자리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선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인위적인 장치들로 인해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하락세다. 기술형입찰보다 낮은 공사비 탓에 유찰이 빈번하다.

업계에선 종심제의 균형가격 산정방식(상·하위 20% 제외)과 동점자 처리기준(저가투찰→균형가격 근접자, 수의계약 협상가격 기준(종심제 평균 낙찰률→기술형입찰 평균 낙찰률)만 바뀌도 낙찰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투자시장 공공성 확대 범위 ‘축각’

9 민자시장 공공성 강화

내년 민간투자시장의 화두는 공공성 강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민자 도로·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내걸었다.

1호 법안인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실시협약 변경 강제, 민자도로감독원 신설, 통행료 인상률 제한 등 민자사업의 기본 틀을 부정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하지만 민자업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독소조항이 대거 삭제 또는 완화됐다.

공공성 강화 기준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행료 인상을 목표로 각종 민자제도를 손보거나 기존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작업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

료를 낮추려면 정부의 투자지분을 늘리거나 민자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 연장, 수익률 인하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상사용기간 연장의 경우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확대 가능성도 있다. 김형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은 “수익률 인하는 리스크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를 정부와 분담한다면도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있는 구조여서 BTL 방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 강화는 안그래도 침체된 민자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맞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현 대한

건설협회 부장은 “일본, 터키 등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민자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K건설이 수행한 유라시아 해저터널 프로젝트에서 터키 정부는 통행량 보증(연간 6만8000대)과 대주단 채무인수 보증약정(9억6000만달러)으로 12억4000만달러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을 성사시킨 바 있다.

10 해외인프라·도시공사

해외 건설시장은 국내 건설업체의 탈출구다. 하지만 해외시장 여건도 국내만큼이나 신통치 않다. 올해 11월 말까지 해외수주 실적은 242억달러로, 10년 만에 최저치였던 지난해(282억달러)보다 14% 적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절반 나을 게 없다.

정부가 국내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있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자격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해외건설 수주에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금융지원,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내년에 출범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이 주목된다. 금융 설계 및 수주를 위한 공공시행사 성격이다. 해외건설시장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수주전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바뀌고 있어 KIND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조직은 30~5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해외공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해 공유·활용하는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도 내년 하반기에 발족한다. 해외진출을 꿈꾸는 업체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네트워크, 정부 간 교류 등을 통해 획득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참여하는 ‘팀코리아’를 위한 상설 협의체(해외 인프라 진출 협력회의)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온 글로벌인프라펀드(GIF)와 리스크가 큰 사업개발 단계에 분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 등 금융지원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스터고, 해외현장훈련, 퇴직자 재취업 교육 등 해외 우수인력 양성과 청년취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주간 입찰동향

조달청, 이번주 4710억 규모 대기

조달청은 이번주(12.11~12.15)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공사' 등 모두 98건, 4710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주요 집행물량을 살펴보면, 오는 12일 적격심사 방식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건설사업 건축공사(한국폴리텍 6대학영천캠퍼스 설립추진단·추정금액 161억2200만원) △정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강원도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136억4800만원)을 집행한다.

14일에는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상~교리2)건설공사'(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1072억8500만원)를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을 적용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앞서 열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는 모두 32개 건설사가 통과해 이날 투찰에 나설 전망이다.

같은 날 적격심사 방식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경기도 여주시·206억9200만원) △비유항 정온도 개선사업(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229억5500만원)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건축공사(남양주도시공사·148억4200만원) △호남119특수구조대 청사 신축공사(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127억1000만원) △UST 다기능 복합지원시설 관련 건축공사(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104억800만원)를 집행한다.

이어 15일에는 역시 적격심사 방식으로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 건립공사(해양

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197억1200만원) △삼척 원평지구 연안정비사업(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188억6800만원)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건축공사(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130억3700만원)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청사 신축공사(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124억9400만원) △용죽초(가칭) 교사 신축공사(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115억8900만원) △다정고등학교 신축공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107억9700만원)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신축공사(법무부·100억3000만원) △금강유역환경청 청사 신축사업(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100억700만원)을 집행한다.

이번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여주시 수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등 집행 건수의 약 82%(80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다. 조달청은 전체 약 32%인 1529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53건, 1087억원이다.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는 27건, 955억원이다. 이 중 442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전망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1468억원, 경기도 798억원, 전라북도 518억원, 그 밖의 지역이 1926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 기준으로 약 23%(1073억원)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다. 대형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3636억원)와 수의계약(1억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

SK건설,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2공구 턴키 수주

SK건설이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2공구 축조공사'를 수주했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로 턴키방식을 적용해 집행한 이 공사 가격개찰을 진행하고 실시설계 적격자로 SK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SK건설은 설계점수 61.47점, 가격점수 29.9985점을 얻어 모두 91.4685점을 획득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낙찰가격은 추정금액 대비 99.99%인 2014억4000만원이다.

SK건설은 51%의 지분을 갖고 토우건설(충북·김사석·15%), 용진(전남·김한섭·10%), 신화건설(강원·윤수홍, 권은동·7%), 해광건설(울산·손호태·7%), 태성건설(울산·박상원·5%), 여운(강원·정의섭·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 공사는 동해안 3단계 방파호안 2공구 축조공사는 1016m 길이의 방파호안과 해안보호대책시설 1식, 부대공 1식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SK건설은 이로써 올해 두 번째 기술형입찰 물량을 따냈다. 한상준기자